

# '출신지역 차별인사' 법으로 금지 하자

### 유성엽 의원, 여야 100여명 의원과 함께 '특별법안' 발의... "차별은 국민통합·인재활용 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25일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법안에는 유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103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출신지역 차별은 우리사회의 병폐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정치와 결부되어 정권에 의하여 전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라 할 수 있다"고 하며, "정권에 따른 특정지역 출신의 차별은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못하여 실질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고, 출신지역 차별이 이들 차별행위에 비하여 해악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통합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지역 출신의 다수의 사람들을 제한, 배제 등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으로 하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은 제외, 법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으로



정치혁신 국민 핫라인 개통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진행된 정당발전위원회 혁신 핫라인 개설 퍼포먼스에서 추미애(왼쪽) 대표와 최재성(가운데)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하며, 정부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원에 대한 인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기관 등에서는 출신지역 차별인사와 출신지역 정보의 수집, 관리가 금지되고, 출신지역 차별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조사 및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 필요시 검찰총장 등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인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두었다.

대표발의자인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어 왔고,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국민통합과 잠재적소수의 인재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새로 출범한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면서 "그것이 인사문제라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재량권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복지부·산하기관 男육아휴직 2.8%

저출산 대책 마련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주요 산하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2.81%(대상자 5,870명 중 1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44.24%의 1/15 수준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솔림이 뚜렷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정주시갑)이 복지부 및 주요산하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4년 1.85%(대상자 1,996명 중 37명)사용 △2015년 2.96%(1,960명 중 58명)사용 △2016년 2.66%(1,914명 중 70명)사용하여 3년간 평균 2.81%(5,870명 중 16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저출산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조차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1,170명 중 45명)이라는 것은 아직 남성육아휴직 사용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조차 외면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꼬집었다. /김진성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조사 급한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문제를 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11시께 대법원 첫 출근길에 기자와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여부는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격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이 새롭다"며 "제가 대법원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기대에 부응하고 격정을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첫 출근 소감을 밝혔다. /뉴시스

## 이철희 "MB 청와대가 정치·선거개입 주도 가능성"

### MB,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두 차례 직접 지시... "명백한 증거자료...김 전 장관 등 재수사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댓글 논란의 정점에서 있는 군의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철희 의원은 25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하면서 여론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증원 증가와 대남(對南) 심리전에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적혀

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가 작성·보고한 이 문건에 친필 서명을 했다. 문건에 따르면 군무원 증원 증가 관련 사항에 "BH는 국방부 입장에 동의하며, 군무원 순수 증원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로서 기재부 협조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명문화 강조"라고 적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한해 7~8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하

다가 2012년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79명을 채용하고 이 중 47명을 댓글공작이 이뤄진 530심리전대에 집중 배치했다. 더욱이 11월에 이뤄지던 군무원 채용도 2012년에는 7월로 4달 앞당겨 이뤄졌다. 이때 채용된 군무원은 기무학교 등에서 5주간의 합숙 교육을 받았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곳을 직접 방문해 정신교육 특강을 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취급(대외보안)'으로 분류된 문건의 '개요'에는 이 문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히는 김

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 명시돼 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모두 세 가지로 ▲군무원(사이버사령부) 증원 증가 ▲북한의 대남 C-심리전(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다. '향후 추진계획'과 '건의사항'도 있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지난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꼬리 자르기로 덮여 버렸다.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밝혀지는 만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검찰, 원세훈 소환... MB국정원 '윗선개기' 신히탄

검찰이 이명박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 수사와 관련해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26일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내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이명박(75)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에서 자행된 민간인 동원 '사이버와라팀' 댓글 활동의 책임자로도 지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병주(57)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한 지난 7일 "국정원 댓글 활동의 '책임자'는 (민 전 단장이 아닌) 원 전 원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관계시위, 문화계 및 방송사 블랙리스트 등 댓글 외에 국정원의 다른 여론 조작 및 정부 비판 인사 압박 등 활동과 관련해 지시, 지휘 등의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원 전 원장 소환조사는 검찰의 'MB국정원' 수사에서 본격적인 '윗선개기' 신히탄으로 볼 수도 있다. /뉴시스

